



[산업]  
한화시스템 美 에어택시  
300억 투자  
미래 공중 모빌리티 선점  
06

[라이프]  
'옛맛의 추억'  
뉴트로 감성 입은  
레전드 주류 귀환  
L1



# 서울시 “경관심의 사전협의 의무화… 가이드라인 마련”

사전협의 미 이행 등 사후관리 문제  
사후 평가체계 구축 골자 내실화  
경관 왜곡 방지, 조망점 계획·제출

서울시가 도시의 경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경관심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개발사업 경관체크리스트 항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경관심의 도서 작성 방법을 구체화한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2014년 경관법 개정으로 대지면적 3만㎡ 이상인 도시개발 사업, 경관지구·중점경관 관리구역 내 위치하는 건



경관 시뮬레이션 왜곡 사례. (왼쪽) 사업자 제시, (오른쪽) 실제 시뮬레이션



/서울시

축물 등이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도시재정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등 6개의 경관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를 수행해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경관심의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680건 실시됐다.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가 428건

(63%)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사업 157건(23%), 기타 95건(14%) 순이었다.

시는 “경관 관련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관심의 도서 작성 부실, 경관부서와 경관심의 사전협의 미이행, 경관심의 사후관리 부재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시는 ▲경관심의 도서 작성 방법 구체화 ▲경관심의 사전협의 의무화 ▲사후 평가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경

관심의 내실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역사도심 기본계획·생활권 계획 등 관련 계획 반영, 지역경관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교통처리계획 설정 등으로 구성된 경관체크리스트 항목별 설명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내놨다.

체크리스트는 실제 미반영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으로 심의를 상정하거나 점검항목 누락 및 내용 작성 오류 등이 발견돼서다. 시는 경관심의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제427호) 상 경관심의 도서 작성 방법이 ‘포괄적 문구’로 제시됨에 따라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해 내용이 부실하거나 점검항목을 빠뜨린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경관 시뮬레이션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별로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망점을 계획해 제출하도

록 했다. 현재 각 조망거리(근경, 중경, 원경)에서 경관 시뮬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지만 검증 수단이 없어 실제와 다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는 경관심의 상정 이전에 사전협의 2회 실시를 의무화한다. 공립공고 단계에서는 관련부서 협의 시 조망점 선정, 경관계획과의 정합성, 경관심의 도서 작성 방법 등을 공지한다. 경관심의 단계에서는 공립공고 안내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3D 시뮬레이션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개발사업·건축물 등 경관심의 안건을 대상으로 경관지원, 중점경관 관리구역 및 구릉지역부, 체크리스트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책 개선에 활용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연이은 추위에 고드름 주렁주렁

추위가 이어진 8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선착장 인근 밧줄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다. /연합뉴스

## 경기도, 산하 3개 기관 고양 이전 업무협약 파주·동두천시 “지역균형발전에 위협”

남부에 집중된 기관 북부에 전략 배치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3곳을 2024년까지 고양시로 이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자 파주시와 동두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3개 기관이 한 곳으로 이전되면 경기 북부 지역균형발전 목적을 이루기 어렵고, 주민 피해 의식 회복에도 부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을 고양시로 이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고양관광문화단지로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 배경에 경기도는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북부에 전략 배치해 균형 발전과 문화·관광·교육 분야 청사를 통합해 관광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파주

시와 동두천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 발표가 이뤄진 이튿날인 5일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에는 ‘경기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 중 1~2곳이라도 파주시로 이전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8일 오후 2시까지 523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최종환 파주시장도 6일 성명을 내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 지역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던 동두천시도 경기문화재단 고양시 이전 소식에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미군 부대 평택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비상이 걸린 것이다.

동두천시는 올해 3월 반환 예정인 미 2사단 캠프 모빌 부지 내에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해 수차례 재단과 협의를 진행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서울시·北·러, 이순신 북방 발자취 찾는다

나선-녹둔도 유적 발굴조사 본격화  
'한·러분과·북·러분과' 나눠 진행

서울시는 북한, 러시아와 함께 이순신 장군 북방유적 발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국내 민간단체인 남북역사학자 협의회(이하 역협)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북한, 러시아와 이순신 장군이 활약한 무대 중 하나인 ‘나선-녹둔도’ 유적 발굴조사를 본격화한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전인 1587년 42세 때 조산보(현재의 함경북도 나선시) 만호 겸 녹둔도 둔전관으로 부임했다. 그는 명·청 교체기를 맞아 세력이 강성해진 여진족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고 녹둔도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

나선시에는 1882년 지방관이 건립한 이순신 장군의 공적비인 승전대비와 당시 사령부가 있던 조산진성이 남아있다. 옛 녹둔도 지역에는 녹둔도 전투의



러시아 조사단의 사전조사에서 발굴된 연자방아.

/서울시

현장인 녹둔도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15세기의 ‘동국여지승람’부터 ‘고종실록’에 이르기까지 여러 고문서에 기록돼 있다.

녹둔도는 조선 세종 시기 6진 개척(경흥)으로 조선 영토로 편입됐으나 두민강 퇴적작용으로 러시아 연해주와 연결돼 육지화됐다. 1860년 청·러 베이징조약으로 연해주와 함께 러시아의 영토가 됐다.

시는 발굴조사 준비단계로 남·북·러가 참여하는 사전조사, 현장답사, 국제

학술회의를 마련했다. 행사는 남북교류가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을 감안해 ‘한러분과’와 ‘북러분과’로 나뉘어 진행됐다.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조사 국제학술회의’는 12월 1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됐다. 회의장에는 러시아가 지난해 올해 녹둔도 사전조사에서 발굴한 조선시대 백자 조각 등 출토 유물들이 전시됐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확대 운영

일정 요건 갖춘 점포에 도로점용 허가

서울시는 동대문구 청량리, 회기 등에서 ‘거리가게 허가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동대문구에서 이달 말까지 ▲청량리역 앞 청량리교차로 일대(52개) ▲회기역(14개) ▲전농사거리(8개) ▲장한평역(3개) ▲신설동역(1개) 등 총 78개 무허가 노점들을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정비한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점포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시민과 상인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도 폭을 넓히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물리적 보행 환경 개선 사업과는 차별화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상인과 80여 차례의 대화와 협의 끝에 결실을 보게 됐다”며 “지난 6월에는 동대문구와 거리가게 운영자 간 협약서를 체결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